

#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5.12.09. ~ 2015.12.11

출장지: 일본

출장자: 이병재, 박소영

##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 일본 도쿄

2. 출장기간 : 2015.12.09. ~ 2015.12.11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병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소영	

4. 출장목적

□ 제 32회 한·일 도시개발협력회의 참석

\* 한·일 도시개발협력회의 : 한국 국토교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 국장급 회의로 '83년 이후 매년 양국 교대로 개최('15년에는 일본 개최 예정)

□ 한·일 양국간 도시개발 및 재생 등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공유 및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 도시정책발전 및 상호협력 증진

## II. 출장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5.12.9 (수)	~08:10	■ 인천공항 집결(3층 대한항공 C카운터 앞)	
	08:10~10:10	■ 출국수속 및 도쿄행 비행기 탑승	대한항공 KE0703
	10:10~12:30	■ 비행(인천→도쿄)	2시간 20분
	12:30~13:10	■ 입국수속 후 일본측 안내로 차량 탑승 * 국제선 도착출구에서 정동근 수산관 및 일본측과 합류	일본측에서 차량제공
	13:10~14:40	■ 이동(공항→몬테레이 라쇠르 긴자 호텔, 70km)	
	14:40~15:00	■ 호텔 체크인	
	15:00~15:15	■ 이동(호텔→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6km)	
	15:15~16:30	■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시찰	일본측 안내
'15.12.10 (목)	08:00~10:00	■ 조식 후 호텔 로비에 집결	
	10:00~10:30	■ 이동(호텔→국토교통성, 2.5km)	일본측 안내
	10:40~11:00	■ 국토교통심의관(니시와키 타카토시) 예방	
	11:00~11:40	■ 회의 개시 (양측 단장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기념촬영)	
	11:40~13:30	■ 중식	일본측 제공
	13:30~17:30	■ 전체회의(20분 발표 후 15분간 질문답변) * 일본①발표→한국①발표→일본②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	
	17:30~18:30	■ 호텔에 들른 후 만찬장으로 이동	
	18:30~20:30	■ 환영만찬	일본측 제공
'15.12.11 (금)	07:00~09:00	■ 조식 후 호텔 체크아웃 및 로비로 집결	
	09:00~10:30	■ 이동(호텔→카시와노하, 40km)	일본측 안내
	10:30~12:00	■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 지역 시찰 * 미쓰이 부동산 담당자 참석	일본측 안내
	12:00~13:00	■ 중식(미즈이가든 호텔)	일본측 제공
	13:00~14:45	■ 이동(카시와노하→나리타 공항, 50km)	
	14:45~16:55	■ 출국 수속 및 인천행 비행기 탑승	대한항공 KE0002
	16:55~19:50	■ 비행(나리타→인천)	2시간 55분
	19:50~20:30	■ 입국수속 및 수하물 찾기 ■ 대표단 해산	

\* 기존 : 12.9(수)~12.12(토) 4일 ⇒ 변경 : 12.9(수)~12.11(금) 3일

회의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을 4일에서 3일로 축소

### III. 수행사항

#### 1. 제32회 한일 도시개발협력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015. 12. 10(목) 일본 도쿄 국토교통성

□ 참석자

- 국토연구원 : 이병재 책임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
- 국토교통부(한국) : 진현환 도시정책관, 이소영 과장, 김민정, 백선영, 김수천 사무관, 이주동, 송준수, 장승수 주무관
- 국토교통성(일본) : 쿠리타 타쿠야 도시국장, 이시즈카 타카시 대신관방심의관, 이자키 신야 과장, 카와바타 타츠시, 히라즈카 유지 과장 보좌, 후쿠나가 신이치 국제실장, 카와세 아츠오 국제실 과장보좌, 카와테 히로유키 국제실 국제1계장

□ 주요 논의내용

구분	발표주제	발표자
한국	① 한국의 도시재생사업과 금융지원	김민정 (도시재생과 사무관)
	② 민간투자를 통한 공원조성 방안 및 용산국가공원 조성	송준수 (녹색도시과 주무관)
	③ 한국의 도시방재 정책	이병재 (국토연구원 박사)
일본	① 콤팩트시티의 본격적 실시와 지역활성화	카와바타 타츠시 (도시계획과 과장보좌)
	② 관민 연계한 공원녹지의 정비, 관리, 운영	히라즈카 유지 (공원녹지경관과 과장보좌)
	③ 환경공생형 도시개발의 해외전개	후쿠나가 신이치 (총무과 국제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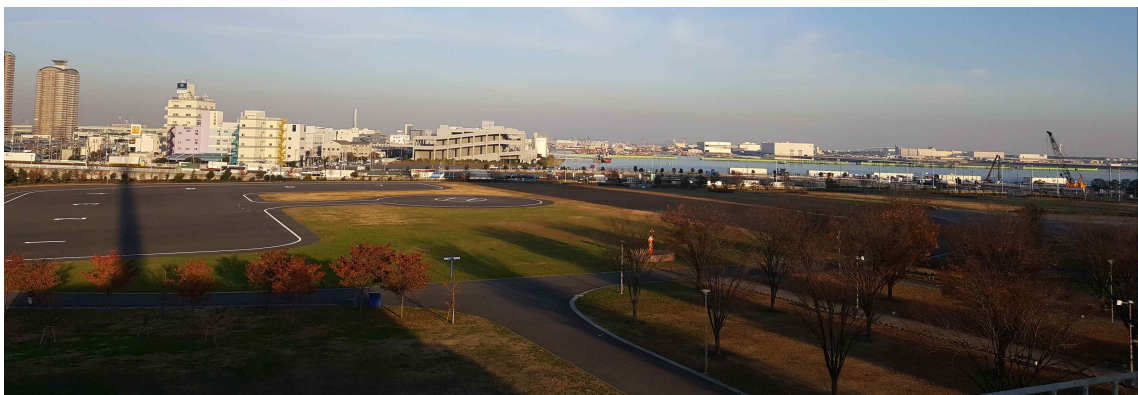
## 2.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 방문

### □ 공원 개요

- (기능) 평상시에는 도시공원\* 및 재난대비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는 재해정보 총괄과 응급대책을 조정하는 '재해 현지대책 본부'가 설치되는 방재 거점시설로 활용

\* 국토교통성이 관리하는 국영공원, 도쿄도가 관리하는 도립공원으로 구성

- (위치/면적) 도쿄도 고토쿠 아리아케 지역에 위치하며, 전체 13.2ha의 넓이(국영공원 6.7ha, 도립공원 6.5ha)



## □ 공원 시설

### ○ 본부동(광역 방재 거점시설)

- 내각부가 관리하는 곳으로, 내진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배치한 점 및 위성을 이용한 무선시설로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접속가능한 점이 특징



방재 체험실 입구



방재 체험실 내부

### ○ 입구 광장(의료지원 용지)

- 본부동과 아리아케 병원 사이에 있는 1ha의 공원지역을 재해시 구조대와 부상자 분류를 위한 장비와 설비, 의료지원공간으로 사용

### ○ 다목적 광장, 녹지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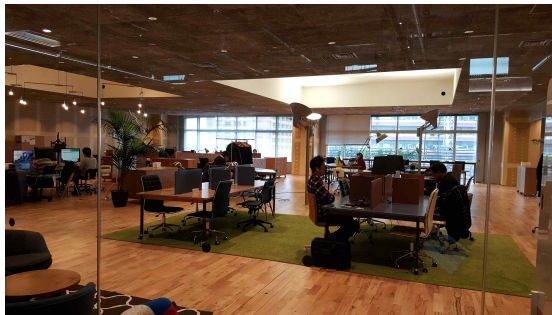
- 재해 발생시 헬기 이착륙장과 의료지원 용지를 제외한 공원지역을 인명구조나 재해복구를 위해 파견되는 지원인력이나 자원봉사자를 위한 베이스캠프로 활용

### 3. 카시와노하 스마트 시티

#### □ 개발 개요

- 행정기관(카시와市)과 대학(도쿄대 및 지바대), 기업(미츠이 부동산)이 공동으로 미래환경 문제와 경제·복지 문제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14년 완공)

\* '카시와노하 캠퍼스시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10년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CO2 선도사업으로 채택하여 지원



스타트업 임대 사무실



관제실

#### □ 주요 내용

- (도시건설) 에너지 지구환경문제, 초고령사회, 일본경제의 부활 등 3가지 중점과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건강 장수 도시, 신산업 창조도시를 구현하고자 카시와노하 캠퍼스 시티 사업 추진
  - 특히, 스마트시티는 '카시와노하 캠퍼스 전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호텔, 주거, 상업용 오피스 등으로 구성

- (에너지관리) 도시내 미이용 에너지를 활용하고 통합 에너지관리 및 전력소비상황 시각화시스템을 구축
  - 2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및 음식물쓰레기 발전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전폐열, 지열, 온천열 등을 냉난방 및 온수공급에 사용
  - 미이용 에너지 도입으로 정전시에도 평소의 60% 수준의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비상전원을 통해 수돗물 공급도 확보 가능
  - 주거·상업용 단지에 EMS(Energy Management System)를 설치하여 탄소배출량을 '05년 도쿄지역 평균 기준으로 40%까지 줄일 계획
  - 호텔용 단지에는 AEMS(Area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는 '카시와노하 스마트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전체의 에너지 운영과 재난방지기능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
- (지역주도형 마을만들기) 주민들이 교류하고 활동하는 콤팩트시티를 위해 지역장터, 마을클럽, 지역방송국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

## IV. 행사사진

### 1. Courtesy call on VM Nishiwaki



### 2. Meeting





## V. 부록 : 발제 및 토론

### 1. 컴팩트 시티 추진 (일본)

#### □ 개요

- 발표자 : 국토교통성 도시국 도시계획과 과장보좌 가와바타 다쓰시
- 주요내용
  - 일본의 인구동태, 도시의 과제와 정책 방향, 컴팩트시티가 지향하는 효과, 입지적 정화 계획제도 창설, 관계시책과의 연계 등

#### □ 토론내용

- (한국) 컴팩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연계가 중요함.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실질적 연계수단은 무엇인가?
  - ⇒ 총괄은 내각의 지방창생대신이 추진하며, 국토교통성이 참여하는 지원팀을 운영 중. 표면적으로는 협력하지만 부처마다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횡적 연계는 어려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 부처연계를 어떻게 할지가 앞으로의 과제임
- (한국) 국가가 파급효과가 지역에 국한되는 정책·사업에 개입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 ⇒ 인구여건을 감안한 컴팩트시티를 국가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지자체에 국가재정 지원
- (한국) 도시를 컴팩트화할 경우 안전의 문제 우려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 모든 도시를 컴팩트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 후 컴팩트화할 도시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

## □ 시사점

### ○ 입지적정화 계획 도입 필요성 검토

- 한국의 중소도시도 오랜 기간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재정악화로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에 한계가 노정됨. 따라서 중소도시정책으로서 입지적정화 계획 도입 필요성 검토 필요

## 2. 한국의 도시재생 정책방향 (한국)

### □ 개요

#### ○ 발표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김민정 사무관

#### ○ 주요내용

-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추진방향과 추진현황,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금융지원 방향

### □ 토론내용

- (일본) 일본의 콤팩시티는 5~10만 규모의 도시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3개 선도지역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 기본적으로 쇠퇴진단 지표를 활용하되, 사업의 파급효과, 계획의 충실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한국은 2000년 초반까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도시보다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확장적 도시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2000년대 이후 인구성장률이 감소하고 도시는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일부도시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공동화, 건축물 노후화 등 도시활력이 저하되는 쇠퇴가 시작되고 있음

⇒ 외연확산, 성장중심의 도시정책이 한계에 이룸에 따라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작년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 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 중임

○ (일본) 선도지역에 대한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 ⇒ 도시재생은 공공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민간의 창의와 자금을 더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함
  - 도시재생특별법 만들어 최소한의 인프라 공급을 위하여 국가예산을 지원함. 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규제 Free-Zone)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기반을 구축. 지자체는 공유지를 출자하고, 민간의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공적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 SPC 만들 경우 국가 기금이 출자·용자·보증 등의 지원

○ (일본) 일본의 국가 재정지원은 주로 낙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하며, 대도시 재생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 한국에서도 재정당국에서 막대한 정부재정소요를 우려하고 있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임

#### □ 시사점

○ 다양한 지자체의 쇠퇴문제에 대응하여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원칙과 기준 재정립 필요

### 3. 관민이 연계한 공원녹지의 정비·관리·운영(일본)

#### □ 개요

- 발표자 : 국토교통성 도시국 공원·녹지경관과 과장보좌 히라츠카 유지
- 주요내용
  - 도시공원의 현황, 민간사업자를 통한 도시공원 관리,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관리, 녹화기술, 사회·환경공원녹지평가시스템

#### □ 토론내용

○ (한국)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1인당 10m<sup>2</sup> 목표를 설정한 기준이나 이유가 따로 있는가?

⇒ 정량적인 이유가 근거는 따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타당해 보임.

○ (한국) 옥상녹화나 벽면녹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인센티브를 받은 후 고의적으로 훼손 시에는 그에 대한 제재 방안이 있는가?

⇒ 금전적인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자체 자체적으로 세금 감면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인센티브만을 목적으로 옥상녹화나 벽면녹화 후 훼손할 경우에 대한 방지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국) 일본의 국가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은?

⇒ 국영공원 17개소가 운영중에 있음.

○ (한국)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역할과 민간 참여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특별녹지보전지구와 관련하여 현황 및 추세와 관리방법은?

⇒ 일본 내 특별 녹지보전지구는 증가 추세이며, 지자체 매입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 외곽에는 풍지지구를 뒤서 건폐율 제한을 하고 있음. 일본은 급속한 도시확장으로 인해 한국의 그린벨트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 시도 타이밍을 놓침.

## □ 시사점

○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서 민간의 주도적 역할 유도 필요

- 한국의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하여 민간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주도적 계획수립의 방법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지역사회의 공감대에 기반하여 도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도시공원 운영 필요

## 4. 민간투자를 통한 공원조성방안 및 용산국가공원조성계획 (한국)

### □ 개요

- 발표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송준수 주무관
- 주요내용
  - (민간투자공원) 제도도입 배경 및 내용, 민간공원 추진절차 및 사례
  - (용산국가공원 조성계획) 추진배경, 기본구상, 부문별 세부내용, 단계별 조성계획, 향후 추진계획

### □ 토론내용

- (일본) 일본에서도 용지매입의 한계로 오랜기간 착수하지 못한 공원이 많이 있음. 민간공원은 용지매입을 누가 하는 것인가?
  - ⇒ (수용 통해 용지 확보) 민간이 2/3 이상 매입하면, 주민의 1/2 동의 후 나머지 1/3을 수용 가능. 또한 부지 매입비의 4/5를 예치하면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음
- (일본) 일본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비판이 높음.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일몰제는 하나의 좋은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20년 경과 후 공원시설 지정이 일몰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 한국의 도시계획은 모든 지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됨.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일몰되면, 원래 지정되어 있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이용이 가능함
- (일본) 일본의 도시공원법은 관리가 중심으로 개발에 관한 규정과 절차 및 인센티브가 별도로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 민간제안을 수용하는 근거법이 무엇이며, 민간공원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 ⇒ 한국은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며, 공원의 70%를 기부채납 시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가 있음. 단, 민간제안 수용과정에서 특혜시비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 □ 시사점

- 민간도시공원제도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임. 단 사업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높기 때문에 정책과정과 절차를 보다 투명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5. 도시개발의 해외전개 (일본)

### □ 개요

- 발표자 : 국토교통성 도시국 총무과 국제실 후쿠나가 신이치 실장
- 주요내용
  - 도시개발 인프라 시스템 수출의 배경, 수출전략, 도시개발 해외전개의 기본방침과 과제 및 지원방향, 도시개발 해외전개를 위한 지원조직과 관련기관 연계전략 등

### □ 토론내용

- (한국) ODA 해외원조 통해 어떤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 ⇒ ODA는 도시개발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으며, 지금까지는 상대국의 경제발전 지원 측면에서 추진해 옴. 향후 ODA 통해 일본기업의 이익 위한 정책으로 전환 필요
  - ⇒ 특히 일본도시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철도회사가 주도하여 TOD를 추진하고 있음. 향후 성장할만한 신흥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조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민간철도 회사의 개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 과정에 적용할 것을 기대
- (한국) MP, 자문, PM 등 기술지원은 가능하나 투자개발형 사업은 불확실성이 높아 참여가 매우 어려움. 해외도시 수출의 범위, 스코프는 어디까지로 생각하나?
  - 한국은 플랜트 해외진출은 발주사업이 중심이었음. 최근 중동 유가하락 등에 따

라 발주사업이 아니라 투자개발형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자금과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투자해서 이윤을 가지고 가라고 하지만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실패 시 부담이 매우 크고 투자사업에 대한 금융 보증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민간 단독으로는 개척이 어려움

⇒ 실제 투자는 민간기업에서 리스크를 판단하여 결정함. 민간투자 가능성에 따라 일본에서 투자를 계획함

⇒ 장기사업 도중에 수요, 제도 변경 리스크가 매우 높음. 따라서 사업자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음. 서비스 수출, 보험 등이 이를 커버해야 하지만, 도시개발에서는 보험제도가 없음. 현재까지는 컨설팅 중심의 역할 수행. 향후 UR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 시사점

-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사업성 유무 판단에 근거하되, 공공에서는 불투명성 등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LH 등 개발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공공기업의 적극 참여 필요

## 6. 한국의 도시방재 정책 (일본)

#### □ 개요

- 발표자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이병재 박사
- 주요내용
  - 한국의 기후변화 및 재해특성, 한국의 도시방재 전략, 한국의 도시방재 정책 추진 현황

#### □ 토론내용

- (일본) 도시 방재를 위해 미래예측은 어떻게 하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가? 기후 민감도 평가결과에 따라 토지의 자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예측됨.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 한국에서도 주민 반발 우려로 지도가 만들어져도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단, 재해 취약성 분석과 확정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하여 이러한 반발을 저감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1단계 :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1~4등급
  - 2단계 : 주민, 지역전문가 모여서 함께 등급 조정
  - 3단계 : 지자체 검토 및 현장조사
  - 4단계 : 확정
- (일본) 기후변화에 따라 일본도 안전했던 지역도 취약해지고 있음. 위험지도 등은 주민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시사점

- 기후 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일의 지속적 교류협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임

### 7. 심의관 종합토론

-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사무임. 국가는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민간투자 유도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공통점이 있음
-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콤팩트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보여짐. 지방도시 활성화는 향후 장기적인 시야에서 특히 “관리”의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
- 한국은 온난화 진행에 대한 위기감 및 문제의식을 크게 하고 있는 듯 함. 한국에서 계획 중인 학교 운동장 공원에 일시 저장하는 등과 같은 도시계획을 통한 치수계획은 일본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향후 도시문제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 협력 필요